

일반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Local Practices of Borderworks in
the Border Regions of Taiwan and Korea

박배균**·쉬진위***·신진숙****

이 논문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국경을 통해 살아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이런 관점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삶과 우발적 실천들이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① 지방적 차원의 우발적 사건들이 국가 공간과 영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② 국경과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들이 국경/접경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만과 한국의 접경지역을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주요어 : 경계, 경계작업, 우발적 경계, 비재현적 수행, 금문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본 논문은 경기도가 주관한 2020 DMZ 포럼(2020년 9월 17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켰다. 본 논문의 심사위원뿐 아니라 포럼에 참석해 좋은 토론을 해주신 이승욱 교수, 정현주 교수, 이상현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센터장(제1저자, geopark@snu.ac.kr).

*** 대만국립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제2저자, jinnyuh@ntu.edu.tw).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교신저자, kksmsse@khu.ac.kr).

1. 들어가며

최근 경계(border)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은 국경 혹은 접경을 안보와 영토성의 논리로만 설명하는 전통적 인식을 비판하면서, 경계의 관계적이며 다중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특히,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근대적 국가 영토성과 영토 주권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지 않고, 국경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박배균·이승욱·지상현, 2019). 이러한 포스트 영토주의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서사를 넘어 국경/접경을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국경과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이나 평화의 증진에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현장에서의 불만과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경/접경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의 관점이 지니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 한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살아 온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삶과 우발적 실천들이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함을 통해, 지방적 차원의 실천들이 국가 간 갈등의 해소와 평화의 증진에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¹⁾

1) 그런데, 본 논문이 경계만들기 과정에서 비국가적 주체들의 일상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일상적 경계만들기 실천을 국가적 실천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략관계적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상호작용과 경합 과정의 결과물이다(Jessop, 1990). 따라서, 국가의 영토성과 경계만들기 과정도 다양한 장소와 스케일에 기반을 둔 여러 이질적 사회적 행위자들과 힘들이 만나고, 협력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

이를 위해 일반인들의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경계만들기 실천들에 주목하는 Rumford(2014)의 ‘경계작업(borderwork)’ 개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의 형성 과정에서 지방적 행위자들의 일상적 실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과정을 이해함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려 한다. 첫째는 지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accident)들이 국가 공간과 영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발적 경계(accidental border)’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강요된 국경과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방 차원의 비재현적 수행들이 국경/접경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지방적 주체들의 경계만들기 실천이 지니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대만(臺灣)과 한국의 접경지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지방적 사건들과 실천들을 ‘우발적 경계’와 비재현적 수행성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국가의 공식화된 경계만들기 실천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비국가적 주체들의 다양한 일상적 실천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고, 비국가적 주체들의 경계만들기 실천도 현실에서는 국가적 주체들의 경계만들기 실천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실제로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강조하는 바는 국가의 영토성과 경계를 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담론과 재현에 따라서만 바라보지 말고, 국가 행위자들의 재현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일상적 행위자들의 숨겨진 실천과 의지, 그리고 그들이 국가의 경계만들기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1) ‘경계만들기(bordering)’와 ‘경계작업(borderwork)’

최근 들어 접경과 경계에 대한 전통적 국가 중심의 영토주의적 관점에 도전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근대적 영토 개념이 상정하는 확고하게 울타리 쳐진 이상적인 모습과 달리 실재의 영토는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 속에 놓여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박배균, 2017;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박배균, 2019)을 바탕으로 국경과 경계를 관계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Passi, 2011).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계의 ‘다공성(porosity)’이 강조되며, 경계를 고정된 실체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경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토화 혹은 탈영토화의 실천에 주목하여 경계가 만들어지는 복합적 과정에 분석의 초점이 주어진다(박배균·백일순, 2019).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은 국경과 접경지역을 이동과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만 보기보다는, 초국경적 소통과 교류가 발생하는 관계의 공간으로 보기를 권한다. 즉, 국경과 접경지역은 안보와 장벽이라는 영토화의 논리로만 설명되어서 안 되고, 이동과 연결성에 바탕을 둔 탈영토화의 논리도 동시에 작동하는 곳으로 영토성과 이동성이란 두 가지 상반된 힘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Rumford(2014: 3)는 “경계는 연결성의 엔진”이라고 하면서, 국경이 서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구획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토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Rumford(2014: 15)는 영토를 봉쇄하고 국가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안보의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이 국경에 대한 전통적 사고였다면, 최근

에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경이 초국경적 이동과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필요하면 차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의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초국경적 연결과 흐름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했음을 지적하였다.²⁾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는 국경과 접경의 혼종성과 다층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관계론적 관점이 추상적 차원에서 선언적 측면으로만 논의된다면 경계를 생산/재생산하는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실천들과 담론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Passi, 2011). 따라서, 포스트 영토주의에 입각한 관계론적 관점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경계만들기의 실천적 과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경계만들기의 실천을 이해함에서, Rumford(2014)의 ‘코스모폴리턴 경계(cosmopolitan border)’에 대한 논의들은 꽤 유용하다. Rumford(2014)는 ‘코스모폴리턴 경계’ 개념을 통해 국가에 더 이상 결속되어 있지 않은 경계와 국경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이론화하려 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경의 형성, 이동, 제거의 과정이 더 이상 국가의 통

2)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자칫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의 국경 인식이 세계화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세계화,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공동체의 출현 등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상황의 변화는 국경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인식론이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계기인 것은 맞지만,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이 반드시 그러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근대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의 모순적 상황을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이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가 영토성은 자본주의 공간경제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간의 변증법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타협한 상황이며, 세계화란 상황도 국가 영토성을 위협하거나 약화시키는 외생적 요소가 아니라 근대국가의 영토성에 이미 내재된 이러한 긴장 관계가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박배균, 2017: 298). 따라서, 국가 영토성에 내재된 이러한 복합적이고 모순적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여 국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논리에만 주목하는 전통적 영토주의 관점보다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는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이 더욱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제권하에 있지 않고, 다양한 힘들과 행위자들, 특히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계만들기의 핵심적 과정들이 점차 국가로부터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Rumford, 2014: 2).

실제로 경계는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공항, 항구, 여행사 사무실, 데이터베이스 검사실, 장거리 이동하는 화물트럭의 번호판 숫자가 스캔되는 곳,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 등과 같이 정보, 사람, 물자의 이동과 흐름이 통제되는 모든 곳에서 경계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곳에서 경계는 존재한다(Balibar, 2004: 1; Rumford, 2014: 13). 따라서, 국가의 경계는 이제 더 이상 영토 끝단의 변두리 공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고, 사회의 각 부분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의 일상적 삶으로 분산되고 흩어져서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포페스쿠, 2018: 55). 그리고, 이러한 ‘경계의 토착화(vernacularization of border)’로 인해 경계만들기의 지방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계의 토착화’는 학문적 분석의 초점도 국가에 의한 경계만들기에서 지방적 행위자들에 의한 일상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경계만들기로 이동하도록 만든다. 특히, 경계만들기의 실천이 사회 곳곳으로 분산됨에 따라,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경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umford(2014)는 경계만들기의 실천에서 국가 행위자 보다는 지방적 차원의 미시적 행위자들을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상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경계만들기 실천들을 ‘경계작업(borderwork)’이라 개념화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경계의 구성과 해체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경계만들기의 과정이 많은 경우 안보와 같은 국가적 어젠다보다는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에 의해 제기된 ‘풀뿌리(grass roots)’ 어젠다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Rumford, 2014: 23). 따라서 경계만들기의 과정은 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국가 스케일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라 일관

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다양한 위치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Rumford, 2014: 16).

이처럼 경계만들기 과정에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실천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 실천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적 실천들이 경계형성에 미치는 과정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념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행위자들과 달리 실질적인 제도화된 권력을 지니지 않은 지방적 주체들이 어떻게 경계형성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보다 엄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① 지방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우발적 사건들이 국경과 접경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② 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재현된 경계의 논리와 달리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이 경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려 한다.

2) 지방적 사건과 우발적 국경

경계만들기의 지방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중앙의 관점에서 경계를 보지 말고, 접경지역과 주변부의 시선으로 경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Rumford, 2014: 19). Coleman(2005)은 경계와 접경이 이동성과 영토성의 복합적 교차공간임을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국경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고 서로 깊이 결합되어 작동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Coleman(2005: 189)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안보/영토성의 논리와 경제/이동성의 논리가 결합하는 방식은 국가 중심부의 엘리트들에 의해 일관되고 합리적 방식으로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와 스케일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 간

의 복합적 경합이 공간상에 무질서하게 펼쳐지면서 우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경계만들기와 관련되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들의 비일관성과 무질서함은 스케일 간 불일치와 긴장이란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박배균·백일순, 2019). 특히, 국가의 중심부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영토성과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계만들기의 실천과 국가 영토 내의 오지인 변경지역에서 일상적 삶과 지방적 맥락 속에 바로 뿌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계만들기의 실천 사이에는 많이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보와 영토성의 논리도 국가의 중심부에서 규정되는 방식과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방식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안보 논리는 경계 너머의 주체들을 타자화하고,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공포의 지정학(geopolitics of fear)’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국경 너머의 타자화된 주체들이 한때는 일상을 공유했던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이들이 지니는 안보와 타자화의 감각은 국가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안보와 타자화의 감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박배균·백일순, 2019: 204). 이런 면에서 국가의 중심부와 국가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관점에 복속된 채 경계만들기의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 국경과 접경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하여 Chu and Hsu(2021)는 지방의 시선으로 접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서 ‘우발적 경계(accidental border)’ 개념을 제시하면서, 오지의 변경지역이 주변부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변적 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접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실천들이 국가 영토성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 구성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나 국경이 어떤 우연적 계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대만’이란 국가의 형성은 매우 정교하게 추진된 지정학적 전략과 계획의 산물이라기보다

는 예상치 못했던 우발적 사건에 가깝다(Lin, 2010). 그런데 여기서 ‘우발적(accidental)’이란 것은 예기치 않게 발발하여 큰 의미 부여가 불필요할 정도로 지엽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의 발발을 둘러싼 여러 본질적인 실체와 인과력들을 해독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필연성과 우연성, 그리고 추상과 구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 따르면, 표피적으로는 아주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 보이지 않는 필연적 인과관계들이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활성화됨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Sayer, 1992). 따라서, 특정의 사건을 어떤 본질적 인과관계의 단순한 파생물로 바라보면서 그 근본적 인과관계만을 파악하려 해서는 사건의 실질적 원인과 배경을 놓칠 수 있다. 오히려 여러 힘들과 조건들이 우발적으로 중첩되고 연결되어 특정의 사건으로 활성화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Chu and Hsu, 2021: 3).

그렇다면 국경과 접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계만들기의 우발적 실천과 사건들은 어떠한 구체적 계기를 통해 관련 국가들의 본질적 영토성과 지정학적 특성을 판독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와 관련하여 경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여러 저발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철도, 도로, 공장 등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지만, 동시에 이들 인프라가 건설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Larkin(2013)은 인프라가 물질적 성격뿐 아니라 담론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인프라의 이중성(duality of infrastructure)’ 개념으로 설명한다.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반드시 교통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원래의 물질적 기능성과 목적에만 부합되도록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후원의 표시, 지역 발전의 비전 제시 등과 같은 정치적 수사와 상징적 필요에 담론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

우도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프라가 지나는 이 두 가지 성격이 항상 조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건설 이후 인프라의 적절한 관리 사이의 불일치와 같은 역설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국경이나 경계도 이러한 물질이자 담론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인프라로 바라볼 수 있고(Chu and Hsu, 2021: 3), 이를 통해 경계의 우발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Chu and Hsu(2021: 3)에 따르면, 경계는 ‘질서만들기(ordering)’와 ‘타자화하기(othing)’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는 인프라인데, 이 이중적 성격이 때에 따라서는 서로 조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엇갈리기도 하는 우발적 관계에 있기도 하며, 이러한 우발성이 접경에서의 일상적 경계작업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먼저 국가는 그 자신의 영토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경계 인프라(검문소, 출입국 관리시설, CCTV, 마약탐지견 등)를 활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물자, 자본 등의 흐름을 통제한다(Coleman 2005).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계는 국가의 영토 구획을 위한 ‘질서만들기(ordering)’를 수행하는데(Chu and Hsu, 2021: 3), 이는 경계라는 인프라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계는 영토 공간 속에 체현된 특정 질서 체계에 복속되는 내부인과 그렇지 않은 타자들을 구분하는 ‘타자화하기(othing)’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는 경계라는 인프라가 수행하는 담론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에 해당된다.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통한 질서만들기(border-ordering)’와 ‘경계를 통한 타자화(border-othing)’가 항상 조응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3) 예를 들어, 국경 획정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중단 혹은 축소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속하는 공동체의 경계가 변화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국경 건너편에 속한 사람들을 자신들과는 다르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타자로 바라보게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국민(nation)’이란 것을 경험하고 상상하게 된다(Chu and Hsu, 2021: 3). 즉, 경계라는 인프라가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상징적이고 수사적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앞서 경계만들기의 스케일 간 불일치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접경지역의 지방적 주체들이 경험하는 타자화의 감각은 국가적 스케일의 그것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박배균·백일순, 2019). 또한, 타자화와 관련된 경계만들기의 실천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Rumford, 2006), 이렇게 일상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국경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질서만들기의 국경과는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불일치의 상황에서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즉흥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상호작용은 국가의 ‘경계를 통한 질서만들기(border-ordering)’ 실천을 변화시키는 우발적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다(Chu and Hsu, 2021: 3).

3)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경계만들기

경계만들기에서 지방적 주체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재현적 수행의 과정이다. 접경과 국경에 대한 대부분의 서사와 담론은 국가 스케일의 영토성과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된 재현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 주체들에 의한 국가와 영토에 대한 재현과 그것이 반영되어 구성된 접경의 경관과 이미지들은 지방적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접경의 지방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주의적 재현에 저항하면서 국경과 접경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정동, 대안적 담론과 서사를 만들어낸다. 관련하여 지상현 외(2018)는 접경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에 균열을 내는 다양한 지방적 실천을 강조한다.

접경지역의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는 국가 주체의 재현적 실천뿐 아니라 이와 차별화된 다양한 비재현적 수행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인프라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간-비인간 관계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DMZ와 민통선 인근지역에서 민간인통제선, 군대시설, 철조망, 검문소, GP, 통제구역 등 비인간 인프라 환경은 접경지역의 일상 삶과 분리될 수 없다. 거주자의 신체는 이러한 비인간적 인프라 환경과 얽혀들면서 오랫동안 ‘내적 상호 작용(intra-acton)⁴⁾을 형성하고, 이러한 작용들이 축적되어 후방과 다른 이질적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주지한 바와 같이 Larkin(2013)은 인프라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인프라는 상품과 사람, 아이디어의 흐름이 촉진되고 공간을 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조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인프라는 다른 물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로서, 사물이면서 동시에 사물 간의 관계를 구성한다. 여기서 Larkin이 주목하는 것은 인프라가 물질적 이동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윤리적 담론을 구현하고 흐르게 하는 순환적 아키텍처라는 점이다. 인프라는 물질적으로 건조된 토대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대중이 자신들의 욕망과 환영을 투자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Larkin(2013: 334)에 따르면, 인프라는 반직관적인 반응의 범위를 유도하는 복잡한 감정적 투자를 생성하고 일시적인 감수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프라는 표면상 중립적인 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술의 운영은 시민의 형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근거가 되

4) Barad(2003)는 인간-비인간 사이의 내적-상호작용(intra-action)을 포스트 휴머니즘적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 설명한다. 이는 인간-비인간(human-nonhuman) 사이의 경계를 주체와 객체로 위계화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행적 관계이자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Barad는 물질과 비인간 요소를 담론과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제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프라 역시 인간의 목적과 수단에 의해 조성된 도구적 환경으로만 볼 수 없다. Barad의 이러한 수행성 개념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조주현(2016: 78~79)에 따르면, Barad는 언어적 수행을 통해 물질성(materiality)이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버틀러의 시각을 긍정하면서도 물질을 담론적 실천의 결과로만 인식하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즉, 물질적·담론적 수행 과정이 분리할 수 없는 내적-상호작용을 형성하며, 바로 이 점에서 Barad는 물질 생산에서의 담론적 수행을 특권화하는 인식틀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며, 종교적·정치적 영역과 함께 얽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Larkin, 2013: 331). 인프라는 정치적 합리성, 행정적 기술 및 물질적 시스템이 혼합된다. 따라서 인프라는 기술적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해당 시스템 내의 '심리구조(mentality)'와 생활방식을 만들어내는 토대 시스템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접경지역 인프라 역시 이러한 Larkin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해 조성된 고정된 군사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이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삶의 반복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 구축된 군사 안보 시스템은 특정한 시민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다른 지역사회와 구별하도록 만들어왔다. 즉, 접경지역의 인프라가 특정한 지방적 주체성을 만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후방과 구별되는 전방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접경지역 인프라는 시민과 군사 공간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안보라는 테제를 통해 암호화하고 그러한 생각을 전달하며 감정적으로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접경지역 거주자들이 인프라에 대해 갖는 깊은 감정적 관계, 안보 위협이라는 환경을 통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정치적·윤리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프라의 기능과 의미는 고정되고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자들의 수행적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Barad(2003)가 말한 장치(apparatuses)의 의미처럼, 인프라는 행위자(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포함하여) 간 '내적 상호작용(intra-actions)'으로서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해 그 의미가 구현되는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네트워크다. 접경지역의 수행적 경계만들기 역시 이와 같이 가시적으로 재현되지 않은 행위자 간 '내적 활동(intra-acting)'을 통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 형성된 정동적⁵⁾·감정적 차원의 미시적 위상학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Thrift(2004; 2007)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정동과 감정들이 어떻게 인프라처럼 작동하는지 고찰하면서, 정동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요소들이 물리적인 인프라와 더불어 도시의 정치와 윤리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라고 주장한다. Thrift(2004: 57)에 따르면, 심리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연결하는 정동적 인프라는 물질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연결하는 파이프나 케이블만큼이나 도시의 성격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네트워크이다. Thrift가 말한 정동의 ‘비재현적 지리학(non-representational geographies)’은 접경지역 인프라와 얽힌 다양한 수행적 관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질적 환경을 생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Kim(2016)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뢰와 같이 예기치 않은 전쟁 무기들이 전후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불량 환경, 즉 ‘불량 인프라(rogue infrastructure)’라고 규정한다. 전후 형성된 불량성(rogueishness)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는 지뢰의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지뢰가 묻힌 접경지역은 불안정성과 무차별성을 지닌 불량 환경이 형성된 곳이다.⁶⁾ Kim의 이러한 관점은 Derrida(2005; Kim, 2016에서 재인용)

5) 정동(affects, 情動)이란 일반적으로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 존재들 사이에서 전의식적이고 전언어적인 상태로 발생하는 신체적 감응 혹은 변용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즉, 사람과 유기체, 사물, 장소 등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어나는 재현될 수 없는 다양한 신체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동은 한편으로는 개별자의 주관적 느낌으로 변용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회, 지역 안에서 집합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동적 관계성(affective relationality)에 의해 공간이나 장소에서 구성되는 정동적이고 집합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정동적 조율(attunement) 과정을 거치면서 발현하는 사회적 현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지리와 함께 결합하는 정동적 위상학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지역 혹은 도시의 사건과 변화가 어떤 공간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사유할 수 있다(Pile, 2010; Thrift, 2004; 그레그·시그워스, 2015; Anderson, 2017 참조).

6) 예를 들어, 최근 민통선 인근 마을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장마로 인한 유실 지뢰 여러 개가

가 말한 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 안에서 이념적으로 통합된 나라들에서 형성된 불량 환경 개념과 호응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불량 환경은 적국의 주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미국 헤게모니를 재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접경지역 사회에서 형성된 공포와 불안의 정동은 이러한 접경지역의 불량 환경을 증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접경사회는 이러한 불확실하고 공포를 내장한 불량 환경에 적응되면서 정치적 불평등성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은 유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강한 억울함, 그로 인한 반감과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뢰에 대한 감정, 공포와 불안과 분노, 상실감, 무기력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구조는 접경지역에 형성되어 온 역사적 지리적 경계만들기 작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지뢰와 환경, 접경지역 거주자들이 엮힌 새로운 관계적 존재론이 구성된다. Ahmed(2004)가 말한 감정의 문화정치학의 관점에 따르면, 접경사회에 누적되고 있는 불평등성에 대한 집단적 감정과 이를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지방적-정치적 주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뢰에 대한 접경지역 거주자들의 수행적 관계들은 국가주권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현되어온 지역의 성격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지뢰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비가시적이고 비재현적인 정동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즉, 접경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작은 이야기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견되는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기존의 국가안보에 착근되어 있던 시민정체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유실지뢰 사고는 접경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반복되어 온 현실이다.

3. 동아시아 접경에서 지방적 주체들의 역할: 경험적 사례들

1) 대만 금문도의 ‘우발적 경계’

국경과 경계 설정의 우발성에서 대만의 금문도(金門島, 진먼다오)만큼 전형적인 사례는 없다. 금문은 1949년 이전에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일부로 샤먼(廈門)과 같은 경제적 생활권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금문은 1949년 가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이 인민해방군에 연전연패하며 대만으로 쫓기는 와중에 우발적 계기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대한 중화민국(ROC)의 최전선 방어선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1949년 10월 금문의 구닝터우(古寧頭) 지역에서 본토에서 패퇴하여 오던 국민당군이 금문을 차지하기 위해 진입한 인민해방군을 격퇴하였는데, 이는 그간 인민해방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던 국민당군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승리였다. 그리고 이 우발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금문과 샤먼 사이의 해협에 중화민국(ROC)과 중화인민공화국(PRC) 사이의 경계가 설정된다.

대만으로 피신하여 겨우 자리를 잡고 있던 장제스(蔣介石) 정권은 구닝터우에서의 승리에 고무되어 그 당시까지 인민해방군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은 금문을 포함한 도서 지역에 병력 배치를 강화하면서 이들 도서 지역을 중국 본토를 회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Chu and Hsu, 2021; 박배균·김민환, 2015). 게다가 인민해방군의 입장에서도 다른 상황들과 결합되면서 금문으로 재진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문에서 패퇴한 인민해방군은 금문으로 재진격하기를 원했으나, 몇 개월 후 벌어질 한국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주력이 한반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미국이 대만 해협에 해군을 강화 배치하는 상황이 펼쳐짐에 따라 인민해방군의 금문 재진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화민국(ROC)은 금문을 지배하고 있고, 금문

과 샤먼 사이의 경계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당군이 구닝터우 전투에서 승리하여 인민해방군의 세력 확장을 막았지만, 장제스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신뢰와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대만으로 패퇴해 온 장제스 정권은 여전히 중국 본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본토 회복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관심 사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은 국공내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채 장제스 정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만에서는 장제스의 잠재적 정치 라이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었다(Chu and Hsu, 2021: 5). 하지만,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장제스에게 행운의 기회로 다가왔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질적 안보의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장제스 정권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지원도 장제스 정권이 원했던 중국 본토에 대한 침공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해군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하여 대만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부대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제스 정권의 중국 본토 침공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Chu and Hsu, 2021: 5). 여하튼 이런 우발적 상황들을 바탕으로 중화민국(ROC)의 존재가 확보되었고, 금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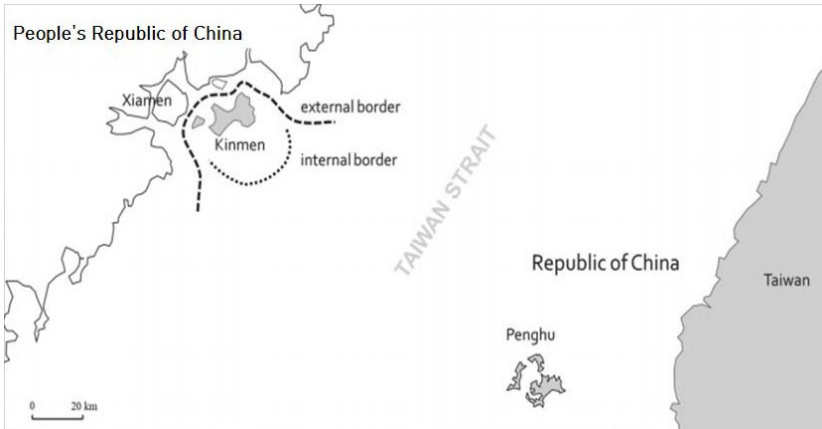
하지만, 이를 계기로 금문은 냉전의 최전선이자, 양안 대치의 갈등과 긴장이 압축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박배균·김민환, 2015: 84). 줄지에 최전선이 된 금문은 섬 전체가 요새화되면서, 전지정부(戰地政府) 체제가 수립되었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금문과 샤먼 사이에는 철저히 통제되는 경계가 설치되었고, 그 사이로 모든 이동과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대중국 경계가 설치되면서, 금문은 그 이전까지 일일생활권으로 엮여 있던 샤먼과 완전히 분리된 고립과 단절의 섬이 되었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던 금문 주민들은

그들이 어로 활동을 하던 어장이 최전선으로 변하여 출입조차 불가능하게 되면서 어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어선뿐 아니라 바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물품들(심지어 농구공마저도)이 엄격히 통제되고 규제되었다(Chu and Hsu, 2021: 6).

이처럼 금문이 최전선의 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외부 경계(external border)’가 확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적과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란 상황은 금문을 대만 본섬에 대해서도 예외적 공간으로 위치 지우게 하였고, 이를 위한 ‘내부 경계(internal border)’가 형성되었다(Chu and Hsu, 2021: 6). 대만 본섬과 달리 금문에는 전지정부 체제가 수립되어 주민들의 삶은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되었다. 민방자위대를 편성하여 금문의 모든 인구를 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원, 치안 유지 등에 동원하였고,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군사훈련에 참여하여야 하였다. 또한, 섬 전역에 참호, 터널, 대피호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의 군사시설을 건설하여 전쟁 준비, 방어, 대외 보급, 군사훈련 등에 이용하였다(박배균·김민환, 2015: 85). 이러한 통제, 규율, 군사화는 금문을 중국 본토와 분리시키는 ‘외부 경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내부 경계’를 만들어 금문을 대만 본섬과 차이가 있는 예외적 공간이 되게 만들었다.

금문을 요새화하고 예외공간화 하였음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무력으로 본토를 탈환하려는 장제스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Chu and Hsu, 2021: 7).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초점이 점차로 군사적 봉쇄에서 경제개발로 옮겨갔다. 196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한국과 대만 등의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국제분업구조와 지경학적 네트워크에 포섭됨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소위 ‘신흥공업국’ 혹은 ‘아시아의 작은 용’ 등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정부의 초점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그림 1> 금문의 ‘외부경계(external border)’와 ‘내부경계(internal border)’



출처: Chu and Hsu(2021: 6).

로서 인정받게 되면서, 대만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금문과 같은 최전선 접경지역의 긴장은 오히려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는 외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과의 전선에서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Chu and Hsu, 2021: 8). 이는 1970년대 이후 금문과 중국 사이의 ‘경계’에서 안보와 영토성의 논리에 입각한 ‘질서만들기’의 기능이 덜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금문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금문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Szonyi(2008)에 따르면, 1970년대 금문에 배치된 병력의 수는 15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만 전체 군인수의 1/4에 해당되는 숫자였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앞서 논의한 Larkin(2013)의 ‘인프라의 이중성’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이는 ‘질서만들기(ordering)’와 ‘타자화(othering)’라는 경계의 이중적 성격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 대만과 중국 사이의 실질적

인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금문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경계에서 ‘질서만들기’의 중요성은 약화되었지만, 대만정부에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금문을 냉전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대만 정부는 경계의 ‘타자화’ 기능을 활용하여 금문을 대만의 다른 곳들과 달리 냉전 지정학의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예외적 공간으로 수사적으로 상징화하려 하였다(Chu and Hsu, 2021: 8). 즉, 1970년대 이후 금문을 둘러싼 경계에서 안보적 논리에 기반한 물리적인 ‘질서만들기’의 기능보다는 ‘타자화’ 논리에 기반을 둔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경계만들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었다.

금문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만에 자리 잡은 국민당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 대만으로 쫓겨 온 이후로 장제스 정권은 줄곧 중국 본토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본토의 탈환을 공언해 왔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만 대만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문을 군사화하고 요새화하는 것은 대만 정부가 중국 탈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Chu and Hsu, 2021: 9). 실제로 금문의 요새화와 군사화가 대만의 중국 본토 수복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문을 군사화된 예외적 공간으로 만듦을 통해서 실제 중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강한 의지와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을 보여주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금문의 군사화를 통해 금문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대만 전체가 여전히 비상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가시화하여 장기간 강제되었던 계엄령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금문을 둘러싼 ‘외부 경계’와 ‘내부 경계’는 국가안보를 위한 물질적 기능뿐만 아니라, 장제스 정권과 대만이란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수사적이고 담론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금문은 우발적 사

건을 통해 대만 영토의 일부가 되었지만, 1949년 이후 전체 기간 동안 중화민국(ROC)이란 국가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문을 둘러싼 경계만들기의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변하였고, 이를 계기로 금문의 지방적 주체들에 의한 새로운 경계만들기가 시작되었다.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금문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더 완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에 대만에는 광범위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중국 본토로부터 공산군의 침략도 없을 것이며, 국민당이 대륙을 수복하려 나서지도 않을 것임이 자명해진 상황에서 그간 대륙 수복을 모토로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를 해왔던 국민당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198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터져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1987년 비상사태와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대만은 전반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박배균·김민환, 2015: 91). 이와 더불어 중국과는 다른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도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금문을 예외화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즉,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중국과의 통일을 지향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행적 도구로서의 금문의 예외화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문과 대만 본섬 사이의 내부 경계와 그를 바탕으로 한 금문의 예외적 상태에 대한 요구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다 (Chu and Hsu, 2021: 11).

1987년 대만 본섬에서의 계엄령 해제 이후, 1992년 금문에서도 계엄령이 해제되고 군대의 철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금문과 대만 본섬 사이의 내부 경계도 철폐되어 금문과 대만 본섬 사이의 민간인 이동과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문과 중국 본토 사이의 ‘외부 경계’에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였다. 금문과 푸젠성 사이에 경계를 뛰어넘는 밀수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금문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중국 본토로부터의 밀수품 구입이나 판매에 관여하

게 되었다(Hsi and Weng, 2003). 즉, 금문의 사람들이 중국 본토인들과 ‘불법적으로’ 화해하게 된 것이었다(Chu and Hsu, 2021: 12).

그러나 냉전이 끝났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던 시기에도 금문과 마주(馬祖)에서 경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중국 본토인들과 접촉하여 거래를 한 사람들은 여전히 밀수뿐만 아니라 반역죄로 기소될 위협에 처해 있었다. 2001년 중국과 대만의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소삼통(小三通)’과 관련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된다. ‘소삼통’이란 대만의 금문과 마주, 중국의 샤먼과 마웨이(馬尾) 사이에 무역, 우편, 화물의 직접적 교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안관계의 발전과 금문의 탈영토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박배균·김민환, 2015: 92). 그런데, 초기 대만의 중앙 정부는 소삼통의 실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2001년 1월 28일, 대만의 마주와 중국 본토의 마웨이의 두 지방 정부가 ‘마주-마웨이 협정’을 체결하여 그간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경 무역을 합법화하려 했을 때, 대만 중앙 정부는 처음에는 이 협정의 승인을 전면 거부하였다(Chu and Hsu, 2021: 14). 왜냐하면 기존 양안관계의 기본적 질서가 이 협정을 통해 모두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한 이후 금문과 마주의 예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국과 대만 정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견지하고 있던 ‘하나의 중국’ 패러다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국경 무역을 허용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과 대만 정부 사이에 ‘소삼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만 금문의 ‘외부 경계’와 ‘내부 경계’의 설정을 둘러싼 이러한 과정들은 우발적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만들기’와 ‘타자화하기’ 과정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경계의 성격, 국가의 영토성, 국가 공간의 내부 구조, 국가의 경계작업 등에 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지뢰와 함께 살아가는 접경사회의 정치적·역사적 주체성

접경사회를 이해하는 주류 담론은 이 지역을 생태평화적 공간으로 재현하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른바 접경지역을 둘러싼 DMZ 생태평화담론이 작동한다. 이러한 접경지역과 생태적 재현이 결합한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DMZ와 연결된 생태평화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국내외적으로 탈냉전의 기류가 강화되고 남북관계 역시 협력관계가 모색된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DMZ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역시 변화하게 된다.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통제되는 방어진역으로 인식해 온 냉전 시대의 인식틀에서, 생태평화라는 새롭게 구성된 탈-냉전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냉전의 산물인 DMZ가 남북 간 경계이자 안보의 공간이란 의미를 초월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야생동물서식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접경지역에도 생태적인 평화 이미지가 부여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태적 담론 형성 과정에는 국가적 주체와 지방 주체의 상호 구성적인 실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적 평화 담론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활동과 침입을 막아 생태환경의 복원을 가능하게 했던 지뢰의 물질성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뢰라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예기치 않은 우발적 사고들과 그로 인한 피해도 생태환경이란 평화적 수사 속에 가려지고 만다. 이는 지뢰와 얽힌 접경지역 사회의 지리역사적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된다.

지뢰의 존재는 여전히 접경지역에서 중요한 하나의 현실적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국방부에 의하면, 현재 민통선까지 포함해서 DMZ에는 제거되지 않은 지뢰 수십만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녹색연합 보고서(2021: 10)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에 매설된 지뢰는 약 100만 발이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기준

<표 1> 지뢰매설 현황

구분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	
		비무장지대	민통선 이북	(민통선 이남)	방공진지	서북도서
개소	1,308	786	433	22	37	30
면적(만㎡)	12,816	1,003	11,478	247	27	61
지뢰 수(천 발)	828	380	389	50	3	6

출처: 합동참모본부(2020.09; 녹색연합, 2021: 11에서 재인용).

1,308곳의 지뢰지대와 약 83만 발의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더 공포스러운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미확인 지뢰지대는 특히 접경지역 인근의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에 산재해 있어 전방에 사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지뢰 폭발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녹색연합, 2021: 10). 지뢰는 전쟁 무기로 개발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무기다. 그럼에도 그 정확한 피해 규모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민간인 지뢰 피해자 수도 608명(평화나눔회), 551명(국방부) 등으로, 집계된 수치 자체도 제각각이다(춘천 MBC, 2021).

지뢰의 물질성은 접경지역 인프라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 지뢰는 ‘반(反)-인프라(anti-infrastructure)’로 간주 될 수 있다. 즉, 지뢰라는 무기는 군사적 목적에서 특정 지역에 적의 침투를 막는 인프라 파괴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뢰는 미군 용어에서 적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역-거부 무기(area-denial weapons)’로 분류되기도 한다. Kim(2016)도 지적했듯, 지뢰는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을 파괴하거나 방지하고 사람, 자원, 공급품 또는 상품의 흐름을 방해, 차단 또는 우회하기 위해 배치된다. 지뢰는 단수이면서 동시에 다중이며, 하나의 지뢰는 다른 지뢰의 존재를 암시하며, 지뢰의 발견은 일반적으로 지뢰밭 형태의 공간 격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쟁 후에도 지뢰와 지뢰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인간의 이동성과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기본 인프라의 수리 또는 유지를 방해하거나 방지한다는 사실이다(Kim, 2016: 171).

하지만 Kim(2016)은 역설적으로 ‘반-인프라’로 작동하는 지뢰가 특정한 방식으로 접경지역사회의 환경을 이질화해 온 수행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접경지역에 묻혀 있음으로써 접경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는 이질적 환경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뢰에 의한 환경이 생산되는데, 이는 인프라로서의 기능과 흡사하다. 특히, 남한에 남아 있는 지뢰의 정확한 매설 지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뢰는 우연한 계절적 대기 변화에 따라, 특히 여름 장마철에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폭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뢰는 접경지역 지역민의 삶의 패턴과 심리구조, 행동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량 환경은 주민들이 인프라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미적 가능성에서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뢰오염과 지뢰제거의 정치경제는 지뢰제거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강화한다(닉슨, 2020). 지뢰에 대한 공포가 항상 상존하는 접경사회를 한국의 다른 지역과 구분하고, 역사적으로 변경화해 온 주요 원인도 이러한 지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뢰는 접경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뢰는 땅속에서 숨어서 오랜 시간 동안 열고 부식하고 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우발적인 사고로 폭발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은 이러한 지뢰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뢰를 발견하고 제거하고 해체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주자의 신체와 지뢰 사이에 형성된 특정한 ‘내적-작용’은 접경사회의 불안과 공포와 같은 다양한 정동들이 출현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지뢰, 비극의 반복>(춘천 MBC, 2021.12.18)에서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8월에 내린 비로 강원도 철원 지역 민통선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기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난리를 겪은 후 마을 여기저기에서 유실 지뢰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여름 장마로 인한 피해는 비단 수해로 그친 것이 아니라 빗물에 유실되어 흘러들어 온 지뢰에 의한 공포로 이어졌다. 그해 여름에 유실된 지뢰는 민통선 마을이 아닌 후방지역 강변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KBS, 2021.6.4). 이러한 우발적 사고가 계속되면서 민통선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한적한 농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뢰의 위협이 존재하는,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위험공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 참, 환장하죠. 답답하죠, 뭐. 이게 지금 농부가 할 짓이냐고. 벼도 못 베고 못 베는 건 둘째 치고 답답합니다.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죠. 1년 내 피땀 흘려 농사지은 것을 눈이 왔는데도 베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췌덩 어리가 하나 있길래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보니까 지뢰더라고요. 여기서 세 발 나왔고. 저 뒤에서 두 발 나왔고, 저 입구에서도 두 발 나왔잖아요. 그냥 눈독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지뢰인 줄 몰랐지. 보니까 지뢰더라고 그것도 M16? (질문: 안 만졌어요?) 왜 만졌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만져봤는데 그때 공병 지휘관이 바로 이거 위험한 거니까, 먼저 물러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_ **최종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농지 주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에 사용된 지뢰들이 사라지지 않고 은닉되어 있다가 일상공간과 농지에서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이는 공포감을 드러낸다. 더욱이 췌덩이인 줄 착각할 정도로 지뢰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에 이러한 공포감이 더 커

졌다고 고백한다. 이곳에서 농업을 하는 거주자들 대부분이 유실지뢰가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간인들이 당한 지뢰 피해 대부분은 지뢰에 대한 지식 없이, 인지하기도 전에 우발적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지뢰 위험 경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고를 당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사고를 당한 장소도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이 지뢰에 대한 공포를 더 강화시키는 이유다. 사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지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다고 토로한다. 피해자들은 지뢰인 줄 모르는 채 사고를 당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그것이 지뢰에 의한 피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춘천 MBC, 2021.12.18). 이는 전후 지뢰지대 관리와 지뢰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전쟁 중인 한반도 상황 속에서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지뢰에 대한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춘천 MBC, 2021.12.18). 이러한 국가안보 프레임은 아이러니하게도 접경지역을 지뢰에 대한 위협에 노출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뢰는 일단 설치된 후에는 그 존재론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간을 새롭게 일상적인 위험공간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자체를 전체 국토로부터 예외지역으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접경사회의 시공간적 경험과 역사적 기억들이 누적되면서 수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020년 유실된 지뢰로 인해 가을 수확을 포기해야 했던 접경지역 농부들은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서울 청와대 앞에서 1인 혹은 집단 시위를 벌인다(연합뉴스, 2020.10.21). 시위의 목적은 철원에서 발견한 유실지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시위 현장의 피켓 문구를 보면 이들의 심경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춘천 MBC, 2021.12.18).

[2] “코로나에 멎든 농심/ 목숨 걸고 지러 가세/ 지뢰 농사 지러 가세/ 목숨 걸고/ 지러 가세”, “접경지역/ 농사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제지뢰행동표준 즉각 적용하라”, “냉전시대 군부시절에도 이렇게 안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통제와 감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길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공비 잡는다 마을 지뢰밭 만들고는/ 유실되니 책임 못 진다/ 추수조차 말라 하네”, “주민 생명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이다”.

지뢰는 국가 중심의 경계만들기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는 지방적 주체성의 생성을 촉발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 등장한 문구들을 보면, 국가주의 또는 국가안보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변부화된 접경지역의 감정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지뢰 공포가 지뢰의 폭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집단적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접경 주민들은 유실 지뢰 사고를 생명은 물론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자 정치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뢰의 위험성은 이들 지방적 주체들에게 국가 주권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사실 지역 주민들 내부에 자신들이 ‘국민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형성된 배경에는, 지뢰와 함께 살아온 접경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가로 놓여 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위험은 접경지역에서는 반복되어 온 사회적 공포이자 현실이었다. 현재 접경지역에서 제기된 지뢰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시위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축적되어 온 역사적 감정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아직 생존해 있는 개척 1세대들은 아직도 생생한 지뢰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 개척세대 대부분은 민통선 마을에 입주할 당시, 지뢰에 대한 책임 역시 묻지 않는다는 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불하받아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뢰의 위험을 감당했던 것은 국가가 입주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1983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개간 농지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사건이 발생했고,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 지뢰와 싸워 개간해 일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이후 많은 개척민은 땅을 빼앗기거나 원소유주에게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지뢰에 대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약속한 토지소유권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이때의 기억은 여전히 접경사회의 역사적인 배후 감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민통선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집단적 불만은 지리역사적 기억과 지뢰로 오염된 불량 인프라가 결합해 지속적으로 천천히 형성되어 온 뿌리가 깊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지뢰가 만든 전후의 불량 인프라는 접경지역사회의 역사적 맥락 및 자연 생태계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지방적 주체성을 생성하는 토대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실 표면적으로 보면 지뢰의 목적은 단순하다. 지뢰는 적국의 무력 침입을 막기 위해 매설되며 인간을 대신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무기다. 국가주권과 절합되어(articulated) 주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지속되는 전후 상황에서 지뢰의 의미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지뢰가 전쟁 무기라고는 해도 현재는 남북 경계선을 넘어 접경지역 일상적 삶을 오염시키는 위험물로 탈영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쟁 당시에는 지뢰가 전쟁의 대리 수행자로서 안보담론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안보 프레임을 넘어 접경 거주민, 나아가서는 일반 자국민을 위협하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지뢰라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방적 주체와 그들의 정동적 수행 과정은 접경과 국경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을 균열내고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

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앞으로 유실 지뢰가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량 인프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감각과 정서, 그와 관련된 지방적 주체들의 다양한 수행과 실천들은 기존의 국가주의적 안보 논리와 그에 바탕을 둔 접경 관리 체제의 정당성에 큰 균열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적 경계만들기와 길항하면서, 동시에 이에 저항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접경사회의 지방적 주체성 생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결론

경계는 더 이상 국가의 영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이 아니라, 포괄적 배제와 배제적 포함을 만들어내는 연결 장치로 기능한다. 경계와 접경은 국가의 위치성에 종속되지 않는 나름의 위치성과 능동적 주체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경과 접경에 대한 관점은 많은 경우 여전히 국가중심적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형성된 의미와 가치로 포섭되지 않는,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지방적 주체들의 ‘경계작업(borderwork)’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umford, 2014).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① 지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경계만들기 실천이 국가의 영토성과 국가 공간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계의 ‘질서만들기’와 ‘타자화하기’라는 이중적 특성의 길항관계에 초점을 두어 대만 금문을 사례로 살펴보고, ② 지뢰라는 인프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방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이 어떻게 국경과 접경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에 균열을 내면서 접경과 국경에 대한 새로운 상을 만들어내는지 한국 접경지역에서의 지뢰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반도의 접경, 특히 DMZ를 바라보는 데 어떠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이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반도 접경은 누구의 땅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간 접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국가안보의 추상적 구호와 논리를 바탕으로만 설명했던 전통적 관점은 DMZ 접경지역에서 구체적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단과 적대의 애환을 감내하며 생존해 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접경지역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과 정체성들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혼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국가적 차원의 논리와 관점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위치한 장소들의 다양한 지방적 목소리들이 동시에 고려되는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요구한다.

국가주의적 접경 논의들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접경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접경 정책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접경 정책은 단순히 접경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반도 통일 혹은 평화정책도 포함한다. 즉, 국가적 차원의 안보 논리를 여전히 중심적 위치에 둔 상태로는 한반도 통일/평화 정책에 획기적이고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평화와 관련된 정책 개발에서도 접경지역의 지방적 관점과 주도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 정부와 행위자들이 남북 대화와 교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진작을 위해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여러 다양한 접경지역 지방 정부와 행위자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초국가적 차원의 도시 네트워크의 결성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평화의 논의가 보다 더 다층적이고 다자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기존의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우

발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고접수일: 2021.08.30

심사완료일: 2021.09.15

게재확정일: 2021.09.21

최종원고접수일: 2021.09.23

Abstract

**Local Practices of Borderworks in
the Border Regions of Taiwan and Korea**

Park, Bae-Gyoon · Hsu, Jinn-Yuh · Shin, Jin-Sook

On the basis of the post-territorialist view to the border, this article sees the border not as a mere expression of the state territoriality, but as the socio-spatial construct made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and the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nd forces operating in and through the border regions. As a way of deepening this perspective, it aims at exploring how the daily lives and accidental practices of various local subjec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made, dismantled, or remade.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bordering processes of local subjects more concretely by addressing ① how local acciden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the state spaces and territories are materially and discursively constructed, and ② how the non-representational performances of local subjects, which are made differently from the statist representations on borders and territorie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socio-culturally formed, and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on the border regions in Taiwan and Korea.

Keywords: Border, Borderwork, Accidental Border, Non-representational Performativity, Jinmen(Taiwan)

참고문헌

- 그레그·시그워스(Gregg, M. and G. J. Seigworth) 편저. 2015. 『정동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서울: 갈무리.
- 박배균. 2017.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권 2호, 288~310쪽.
- 박배균·백일순. 2019.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경-지경학」. 《대한지리학회지》, 54권 2호, 199~228쪽.
- 박배균·이승욱·지상현 편. 2019.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파주: 한울.
- 박배균·김민환. 2015. 「단절과 이동의 변증법과 금문 지역경제의 변화: 고량주 경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7권 2호, 79~102쪽.
- 박소영·권태상·김택우. 2018. 『강원도 민북마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미래』. 춘천: 강원학연구센터·강원연구원.
- 조주현. 2016.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25호, 65~104쪽.
-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한반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의 함의」. 《공간과 사회》, 29권 1호, 206~234쪽.
- 지상현·이진수·조현진·류제원·장한별. 2018. 「냉전의 진열과 쇼핑: DMZ 전망대를 통해 살펴본 냉전경관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53권 5호, 605~623쪽.
- 포페스쿠(Popescu, Gabriel) 편저. 2018. 『국가, 경계, 질서: 21세기 경계의 비판적 이해』. 이영민·이용균·이현욱·김수정·이종희·이지선·장유정 옮김. 서울: 푸른길.
- Ahmed, S. 2004.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Vol.22, No.2, pp.117~139.
- Anderson, B. 2014. *Encountering Affect: Capacities, Apparatuses, Conditions*. London: Routledge.
- Anderson, J. and L. O'dowd. 1999. "Borders, Border Regions and Territoriality: Contradictory Meanings, Changing Significance." *Regional Studies*, Vol.33, No.7, pp.593~604. doi:10.1080/00343409950078648.
- Balibar, E. 2004. *We, the People of Europe? Reflections on Transnational Citizenshi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ad, Karen.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Gender and Science*, Vol.28, No.3, pp.801~831.
- Chu, Ling-I and Jinn-Yuh Hsu. 2021. "Accidental Border: Kinma Islands and the Making of Taiwan." *Geopolitics*, doi: 10.1080/14650045.2021.1919628

- Coleman, M. 2005. "U.S. Statecraft and the U.S.: Mexico Border as Security/Economy Nexus." *Political Geography*, Vol.24, No.2, pp.185~209. doi:10.1016/j.polgeo.2004.09.016.
- Derrida, J. 2005. *Rogues: Two Essays on Reas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 in their Place*.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Kim, Eleana J. 2016. "Toward an Anthropology of Landmines: Rogue Infrastructure and Military Waste in the Korean DMZ." *Cultural Anthropology*, Vol.31, No.2, pp.162~187.
- Larkin, Brian. 2013. "The Politics and Poetics of Infrastructure." *Th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No.42, pp.327~343. doi: 10.1146/annurev-anthro-092412-155522
- Passi, Anssi. 2011. "A Border Theory: An Unattainable Dream or a Realistic Aim for Border Scholars?." in Doris Wastl-Walter (ed.).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 Burlington: Ashgate, pp.11~32.
- Pile, S. 2010. "Emotions and Affect in Recent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35, No.1, pp.5~20.
- Rumford, Chris. 2014. *Cosmopolitan Bord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umley, D. and J. V. Minghi. 2014. *The geography of border landscapes*. London: Routledge.
- Sayer, R. A.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London: Psychology Press.
-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pp.57~78. doi: 10.1111/j.0435-3684.2004.00154.x
- Thrift, N. 2007.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Routledge.
- KBS. 2021.6.4. "고양 장항습지서 지뢰 폭발...한강변에서 지뢰 종종 발견".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2101>(검색일: 2021년 8월 23일)
- 녹색연합, 2021. 『지뢰시대, 생명의 땅으로: IMAS 에서 답을 찾다』.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s://www.greenkorea.org/category/archive/publication/>(검색일: 2021.8.23).
- 연합뉴스. 2020.10.21. "민통선 내 마을 주민들, '유실 지뢰' 피해호소·대책촉구."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087900004> (2021년 8월 23일 검색)
- 춘천 MBC. 2021년 12월 18일. "지뢰, 비극의 반복". <https://www.youtube.com/watch?v=oCOC3KAtj9M>(검색일: 2021년 8월 23일).